

# 광주시의회 입법정책관 임기 연장 논란

광주시의회가 개방형 4급 입법정책담당관의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해 의회 인콰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의회 인사평가위원회는 조영무(63) 입법정책담당관에 대한 업무평가를 하고 임기를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입법정책관은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연구 관련 지원 업무를 하며 임기는 2년이고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4월 임용된 조 정책담당관은 오는 4월 임기가 만료된다. 연봉은 7400만원이다.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3월 초 회의록을 열고 조 입법정책관의 임기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업무평가 후 임기 2년 연장 결정 의회 내부적 논의 절차 부족 비판

개방형 직위인 입법정책관의 임용권자는 시의회 사무처장이지만 광주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관 임기 연장에 대해 적절성 논란과 함께 논의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 입법정책관은 화순군청 퇴직 공무원 출신으로 2년 전 임용 당시에도 자격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의회나 광주시 행정 경험 이 없는 화순군청 퇴직공무원이 광

역의회의 입법정책 지원 활동을 총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당시 문제 제기를 했던 시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논란이 유아무이었다. 입법정책관의 상징적인 업무를 감안하면 의원들 간에 임기 연장 여부를 제도화하는 구조적인 논의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공부하는 의회를 표방한 제8대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입법정책관이다"며 "그 자리가 퇴직공무원 자리 보전용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입법정책관이 집행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2년 전 없던 자리를 개방형직위로 만들었다"며 "이번 임기 연장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업무평가에 참여했던 광주시의회 한 관계자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사례 평가에서 광주시의회가 단체부문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한 것은 조 입법정책관의 업무성과로 볼 수 있다"며 "의원들 간 논의가 부족했던 것은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CCTV 관제센터에 걸린 30대 차량털이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새벽 시간대 주택가에서 주차된 차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 미수)로 이모(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 4시1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1대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이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훔친 금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통합관제센터로부터 '한 남성이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 문을 일일이 열어보고 다닌다. 차량털이가 의심된다'는 지령을 받고 출동, 이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이씨의 여죄가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 신안서 주택 화재...60대 숨진 채 발견

신안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23분께 신안군 임자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1시간20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김모(68)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주택 36㎡가 모두 타 50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씨가 잠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쇠파이프 들고 편의점 턴 60대 긴급체포

제주에서 쇠파이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21일 특수강도 혐의로 이모(63)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 임씨는 이날 오전 4시26분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한 편의점에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가 혼자 근무 중인 여종업원 A(46)씨를 위협해 현금 약 4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임씨와 몸싸움은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도주한 임씨는 택시와 버스를 갈아타며 제주시 방면으로 이동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이날 오전 11시25분께 제주 시내 모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40대 가장·자폐 아들, 모텔서 숨진채 발견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한 모텔에서 A(47)씨와 자폐증을 앓던 아들 B(17)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자인 모텔 관리인은 전날 임실한 A씨가 퇴실시간이 지나서도 나오지 않자 확인차 객실을 찾았다가 두 사람을 발견했다. A씨가 남긴 유서에는 최근 사기를 당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과 함께 자폐 아들을 부양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에게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말도 남겼다.

## 부산서 40대가 편의점 흥기 강도 한방 제압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편의점 흥기 강도를 한방에 제압한 뒤 경찰에 넘겼다. 21일 부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부산 동구의 한 편의점에 A(53)씨가 흥기를 들고 들어가 업주 B(55·여)씨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다. 이에 B씨는 편의점에 설치돼 있던 폴리스콜을 눌러 경찰에 신고했고 인근 자성대파출소 경찰들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때마침 편의점 앞을 지나던 시민 C(43)씨는 편의점 안에서 남성이 흥기를 들고 업주를 위협하는 장면을 목격, 바로 편의점 안으로 달려가 A씨를 바닥에 밀쳐 눕혀 버리고 한방에 제압했다. 이어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C씨는 붙잡고 있던 A씨를 경찰에 인계해 상황은 5분 만에 종료됐다.

## 전남도,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 일제검사

전남도는 소와 돼지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함에 따라 백신항체 형성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3월 18일까지 일제검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료 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정밀검사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분담해 추진한다. 농가당 소는 5마리, 돼지는 10~13마리에서 혈액을 채취한다. 침 흘림, 수포 발생 등 유사 증상이 있는지 임상 관찰도 함께 이뤄진다. 항체 형성 수준이 기준 미만인 농가에는 과태료 부과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소 7농가, 돼지 17농가에 2천1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도는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2일까지 소와 돼지 백신 비용 100%를 보조 지원해 166만 2000 마리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5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접종을 완료했지만 누락된 가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백신접종을 해야 한다"며 "구제역 청정 으 뜰 전남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소독과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환 기자



빨래 말리기 좋은 날씨. 낮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의 2~3도 가량 웃돌아 포근한 날씨를 보인 21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 남산마을에 찾아가는 빨래방이 찾아와 주민들이 세탁한 빨래를 말리고 있다.

## 광주·전남 대학생 "5·18 망언 의원 제명·지만원 구속" 촉구

광주·전남 대학생 단체가 21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과 국우는 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망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의 진실'을 왜곡하는 망언을 일삼는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하고 지만원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과 국우는객 지만원씨는 5월 영령과 유가족을 모독했다면서 '이들은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 폄하하며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당지도 않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5·18은 전두환 신군부의 군사정변과 계엄군의 반인륜적 진압에 맞서 광주시민들이 대항한 역사적 사건이자,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자국민을 학살한 사건이다"면서 "6차례의 진상조사에서도 북한군 개입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5·18 당시 광주시민을 학살한 자들의 후신인 한국당과 망언 의원들은 국가가 인정하고 세계 UNESCO도 인정하는 5·18 민주항쟁을 부정하고 왜곡했지만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면서 "이는 명백한 5·18 영령과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씨의 구속 처벌과 한국당 망언 의원 3인의 국회 제명을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